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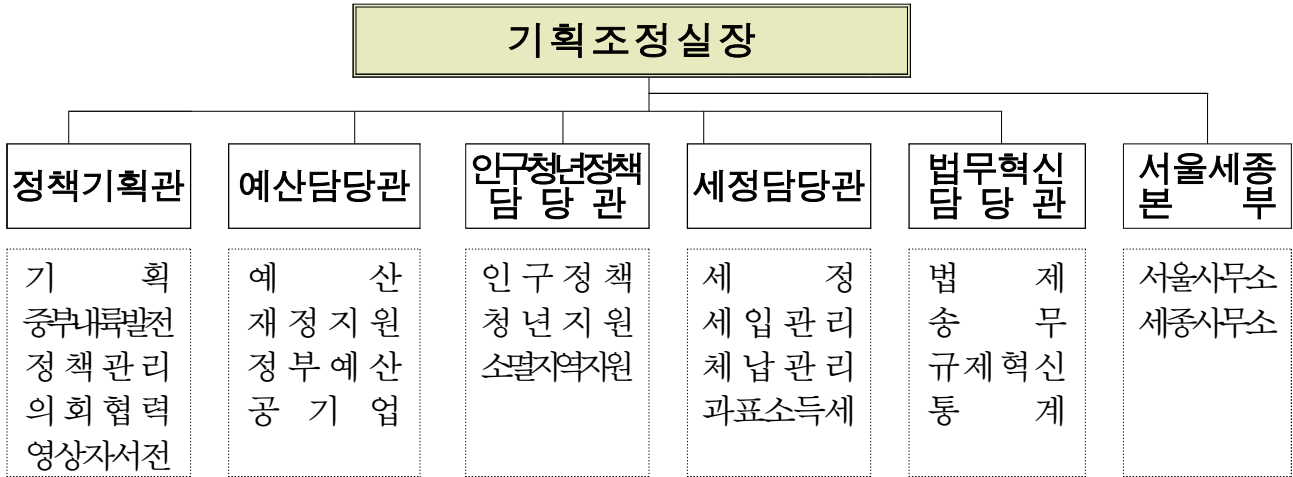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목 차

I. 일반현황	1
II.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4
III.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6
IV.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7
1. 도정발전 종합기획 및 체감실현 정책추진	7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12
3. 사람이 모여드는 인구정책의 중심 총북	17
4. 공정한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	21
5. 도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26
V. 주요 현안사업	31
VI.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34
VII.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35
VIII.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46
IX.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61

I . 일반현황

1 조직 :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1 본부, 20 팀 · 2 사무소



2 정 · 현원 ('25년 1월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18	119	
정 책 기 획 관	31	31	
예 산 담 당 관	26	26	
인 구 청 년 정 책 담 당 관	16	17	
세 정 담 당 관	20	20	
법 무 혁 신 담 당 관	20	20	
서 울 세 종 본 부	5	5	

3 예산현황 ('25년 1월 기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943,719	943,719	0
정 책 기 획 관	10,879	10,879	
예 산 담 당 관	187,251	187,251	
인 구 청 년 정 책 담 당 관	55,802	55,802	
세 정 담 당 관	688,002	688,002	
법 무 혁 신 담 당 관	1,101	1,101	
서 울 세 종 본 부	684	684	

4 주요 사무

실·과명		주요기능
정책기획관	기획	◦ 도정 종합기획 및 조정, 주요 현안사업 관리, 국회관련 업무 ◦ 충북 브랜드 전략 기획·홍보 및 브랜드 상품 다각화
	중부내륙발전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운영 ◦ 중부내륙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
	정책관리	◦ 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연구용역·충북연구원 활성화 지원 ◦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의회협력	◦ 도의회 협력 사무 및 도의회 부의안건 처리 ◦ 대집행기관 질문, 5분 발언 및 건의·결의문 등 후속조치 관리
	영상자서전	◦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 추진 ◦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관리
예산담당관	예산	◦ 재원전망 및 예산 편성·운용 ◦ 주요 재정제도 운영 및 쟁점사항 재정합의·조정
	재정지원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운영, 신속집행 관리 ◦ 투자심사 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정부예산	◦ 정부예산 확보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건의자료 작성 총괄
	공기업	◦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운영지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기금·지방채 관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 출산육아수당 등 임신·출산 장려 지원사업 발굴, 추진
	청년지원	◦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참여·소통 지원 ◦ 청년일자리 발굴, 청년 생활자립지원 등
	소멸지역지원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 태교패키지 지원, 임신부 교통비 지원 등
세정담당관	세정	◦ 지방세정 종합운영 및 징수목표 관리 ◦ 신세원 발굴 및 도세 부과·징수·감면 운영
	세입관리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운영 ◦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결산 등 세입금 관리
	체납관리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납세편의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정기, 기획) 운영
	과표소득세	◦ 지방세 과표 및 지방소득세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운영

실·과명		주요기능
법무혁신 담당관	법제	◦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입법안 검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송무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민사소송 수행 ◦ 지방세납세자 보호관
	규제혁신	◦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 ◦ 도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과제(사례) 발굴·관리
	통계	◦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통계의 심사·분석 및 공표
서울세종 본부	서울사무소	◦ 정부예산 확보 지원, 도정현안 업무 지원(국회, 정당 등) ◦ 국회·정당 등 대외협력 업무 추진, 출향인사 관리
	세종사무소	◦ 정부예산 확보 지원, 도정현안 업무 지원(중앙부처) ◦ 중앙부처 대외협력 업무 추진, 향우공무원 등 관리

5 출자·출연기관

구분	충북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설립일	1990. 5. 15.	2006. 1. 16.
설립목적	도정 현안의 체계적 조사·분석 및 대안 연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도모
자본(기금)	21.7억원	1,738억원
기구(인력)	원장, 1실, 4부, 2분원 (46명)	사장, 본부장, 3실, 6처, 1단 (97명)

II. 2024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1 주요 성과

<< 도민과의 소통,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 >>

- (충북 새 이름(BI), 새 얼굴(CI) 도민 체감 향상) '중심에 서다(BI)', '츠비(CI)'()을 활용한 브랜드 상품화, 정책디자인 개발 등 추진
- (도지사 공약사업) 민선 8기 공약사업의 97%가 정상 추진^(3분기 기준)
 - 도민배심원단 출범('24.5.)으로 공약추진에 도민의견 적극반영
- (대통령 지역공약) 충북지역 국정과제의 91.2% 정상 추진^(3분기 기준)

<<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 >>

- (최대 정부예산 확보) 전년 대비 2.0% 증가한 9조 93억원을 확보, 민선 8기에 최초로 8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9조원 달성
 -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개혁 상황에서 도정 사상 최대 규모 정부예산 확보
- ※ 연도별 확보규모(단위 : 억원) : ('22)76,703 → ('23)83,065 → ('24)88,296 → ('25)90,093

<< 출출하고 다양한 출생정책 >>

- (인구정책의 테스트베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저출생 정책 추진
 -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전국확산, 「임산부 예우 조례」 적극조례 '대상'
 -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5월), mampan 태교패키지(8월)
 -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결혼비용·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8월)
- (도민체감형 사업 추진) 수요맞춤형 사업으로 주민의 높은 호응
 - 태교패키지 지원,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율 초과달성으로 조기 마감
 - 우리아이 먹거리 할인쿠폰 지원, 시행 4개월 동안 74,542건 지원
- ※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캠페인('24. 6~) : 3억 1,000만원 성금 모금

<<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 재원확보 >>

- (자주재원 확충) 안정적 세수확보 및 숨은 세원 발굴^(11월말 기준)
 - 지방세 : 1조 8,371억원 징수(목표 1조 7,629억원 대비 104.2%)
 - 세외수입 : 1,535억원 징수(목표 1,532억원 대비 100.2%)
 -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 137.5억원(목표 119.2억원 대비 115.4%)
- (지방세수 증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50%↑)으로 도세 세입 증가(연 12억원)

《〈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

- (무료법률상담 확대)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무료법률 지원
 - * 대면·전화 상담 218건, 사이버 상담 70건, 찾아가는 상담 96건
-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확대) 테마별 현장토론회(3회),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10회), 道-시군 규제혁신 TF 운영(4회) 등

2 성과에 대한 평가

《〈 도정혁신·성과 도민 체감을 통한 정책추진동력 강화 필요〉》

- (중부내륙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지원, 문화·관광·환경, 균형발전, 첨단산업 등 분야별 특례 추가발굴 및 개정안 반영을 위한 도민 역량 결집, 정책추진 동력 필요
 - (성장하는 충청북도의 미래비전 구현)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을 향해 성장하는 충북도의 미래 비전 구현을 위해 새로운 대표 브랜드 홍보 기반 마련, 확산 필요
- ⇒ 도정 주요현안 추진의 정책동력 확보를 위해 체감형 정책수립 및 도민 정책참여 확대 필요

《〈 정부예산 9조원 시대 → 지속 성장 가능한 발판 마련 필요 〉》

- (정부예산 9조원 시대) 정부의 강한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선 8기 8조원 최초 돌파이후 단 2년 만에 정부예산 9조원 시대 진입
- ⇒ 충북의 민생안정과 경제, 신산업, 관광분야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 인구 자연감소 및 순유출 방지를 위한 수요맞춤형 사업 필요 〉》

- (출생친화정책 강화) 저출생 극복 노력에 대한 높은 대외적 평가와 긍정적인 도민 호응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필요
 - (청년자립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지속
- ⇒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담한 수요맞춤형 정책 필요

III.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도정 종합기획 및 체감형 정책개발



전략

도정발전
종합기획 및
체감실현
정책추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사람이
모여드는
인구정책의
중심 충북

공정한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

도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이행
과제

1.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획 및
충북브랜드
확산

2. 중부내륙지역
발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

3. 도민중심
체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평가

4.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강화로
상생발전 및
도민행복 향상

5. 문화강도(強道)
도약을 위한
영상자서전
사업 확대

1. 건전재정
기조확립 및
투명한
예산운용

2.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책임성
강화

3. 지속가능한
충북 성장을
위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

4.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

1.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

2.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조성

3.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
추진

1.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구현

2.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

3. 전략적 장수를
통한 공정
세정문화 조성

4. 공정한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1. 도민이
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

2.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 구제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

3. 도민이
만족하는
규제개혁 ·
적극행정 ·
도정혁신 추진

4. 정책지원을
위한 과학적
통계생성 및
통계수요
지속 대응

Ⅳ.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1. 도정발전 종합기획 및 체감실현 정책추진

추진여건

- 민선8기 4년차, 후반기 도민 체감형 정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실행력 제고를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방향 제시
- 도민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 도민의 의견을 수용, 반영할 수 있는 현안을 기획, 개발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도정 운영 구현

→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도정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



이행과제

- ①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획 및 충북브랜드 확산
- ② 중부내륙지역 발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
- ③ 도민중심 체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평가
- ④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강화로 상생발전 및 도민행복 향상
- ⑤ 문화강도(強道) 도약을 위한 영상자서전 사업 확대

1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획 및 충북브랜드 확산

1-1. 정부정책 대응 및 도정현안 기획·조정

□ 주요 도정 현안 추진방향 설정 및 도민체감형 정책 운영

- (도정현안 기획·조정) 정부정책방향·대내외 여건 분석 등 체계적 대응
- (도정 대응력 강화) 충북 발전방향 분석 및 논리개발을 통한 대응력 향상

□ 국회, 정당, 중앙부처 등과의 대외 상생 협력 강화

- (대외연대 활성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단체장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한 충북 어젠다(Agenda) 공조 및 현안건의
- (네트워크 지속) 정당정책협의회 및 중앙부처 출향인사 활용 현안사업 및 정부예산 건의, 서울세종본부 중심 중앙부처, 국회 동향 파악·대응
- (소통협치 강화) 충청광역연합을 통한 연계협력사업 발굴·지원, 충청권 행정협의회 활성화로 시도 공동현안 중앙부처 건의 및 대응

1-2. 충북브랜드 확산을 통한 도정 가치 제고

□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브랜드 운영

- (미디어아트 '빛의 정원'^{신규}) 도민 주도의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참여형 디지털 미디어아트 전시로 도민에게 힐링과 감동 선사
- (청년브랜드참여단) 도민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충북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 창출
- (소통 캐릭터 활성화) 도정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도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이모티콘 제작·배포

□ 충북 브랜드 상품 다각화로 브랜드 가치·비전 공유

- (브랜드 상품화) 브랜드 굿즈 제작 및 상설 전시장 설치·운영
- (민·관협력 공동브랜드) 기업,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상생 발전 도모

2 중부내륙지역 발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

2-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부내륙지역 발전 도모

□ 중부내륙특별법 법령 개정 추진

- (특례 반영) 지역 특성화 특례 및 지구 다각화로 지역 성장동력 확보
 -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지역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추가로 지역특화 발전 추진
- (권한이양) 중앙부처 권한 이양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 지역 주도형 정책 추진 발판 마련, 선제적인 지역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 확립
- (재정지원)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 설치, 조세 감면 등 국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 국가균형발전 거점 수행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 (발전전략 수립) 발전종합계획(25. 3.) 및 연도별 사업계획(26. 1.) 수립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지역주도 전략 마련
- (연계·협력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 선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발굴·추진

2-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협력체계 강화

□ 내실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운영

- (협력체계) 정기적 협의회 개최로 교류·협력 강화(8개 시도지사, 의장 등),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특별법 담당 실국장 등)
- (정책·사업 공동 추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협력 등 중부내륙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정책 개발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협의

3] 도민중심 체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평가

3-1.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 정책발굴 및 체계적 관리

□ 행정수요 반영 도정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연구 지원

- (도종합계획 수정) 새로운 국가전략 및 민선 8기 정책 방향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장기 발전 전략 수정
- (AI기반 도정大 전환) AI 일상화 시대에 대비한 도정 전략 수립
 - * AI활용 도정 大 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 인공지능 융합 정책발굴 해커톤 대회 개최
- (충북연구원 협력·지원) 도정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 제시
 - * 도정현안 이슈 페이퍼^{매주}, 정책동향 분석^{매주}(중앙·지방 정책이슈 및 정부 공모사업) 등
 - 도정 핵심현안과 연계한 지역정책연구 추진지원
 - * 국정이슈, 기술변화 대응 연구과제 발굴·수행(기본·전략·기획과제, 정책 및 수탁과제)
- (정책연구용역 관리) 정책 논리개발 및 현안대응 등의 연구활동 지원

□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약사업관리로 대 도민 신뢰도 제고

- (이행률 제고)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자체평가^(1회)로 공약 이행률 제고
- (신뢰도 향상) 도민배심원단 운영,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개최 및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공약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 협력과 소통 도민중심의 정책자문단·위원회 운영

- (정책자문단) 주요현안 자문^(분과별), 도민 중심의 도정 정책과제 연구 등
- (위원회) 성별·지역별 균형 위촉, 실태점검^(분기)·정비를 통한 효율적 운영

3-2.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진입을 위한 전략적 대응

□ 2026년('2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 (전략적 대응) 대응계획 수립^(3월), 실적 점검^(매월) 및 추진상황 보고회^(5회)
- (기술적 지원)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회) 및 디자인 컨설팅^(12월) 지원

□ 평가실적 향상 및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시군종합평가 운영

- (대응전략 수립) 정부합동평가 연계 및 국·도정 성과 제고방안 마련^(4월)
- (평가 및 환류)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 지원^(4~11월), 도·시군 평가담당자 합동워크숍 개최^(하반기)를 통한 체계적인 평가 관리

4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강화로 상생발전 및 도민행복 향상

4-1. 맞춤형 회기 운영 지원 및 의회 정책제안 도정 반영

-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맞춤형 회기 운영 지원**(정례회 2회, 임시회)
 - (맞춤형 안전 제출) 현안과 회기에 맞는 시의성 있는 안전 제출
 - (사전 안전 협의) 의회와 간담회, 자료제공 등 사전 의견교류로 공감대 형성
- **의회의 정책제안 관리 및 도정 반영 지원**
 - (의회 정책제안 관리) 대집행기관 질문,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상황 정기 검토(연 4회), 건의문 등 도정 정책 반영 현황 관리
 - (자료 제공) 서면질문, 서류제출 요구(수시)에 대한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

4-2. 도의회와 협력 강화로 도정 현안 공동 대응

- **도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안 공동 대응 및 도민 역량결집**
 - (정책간담회) 도지사-의회 수시 간담회 및 교류로 도정 협력체계 구축
 - (현안해결 공동대응) 의회와 공동대응으로 도정현안 도민 역량결집 및 해결
-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
 - (소통강화) 도정 관련 수시 보고, 간담회 등 상시 정보교류로 소통강화
 - (의정활동 지원) 도민 의견수렴(토론회, 공청회 등) 및 현장 방문 적극 참여·지원

5 문화강도(強道) 도약을 위한 영상자서전 사업 확대 현안

-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 우리 시대 기록유산으로 보존 위한 토대 마련**
 - (영상자서전 사업 확대) 다양한 도민 대상 토크쇼 조성, 거점기관 기능 확대 및 수행기관 다변화 등을 통한 도민 체감형 사업 체계 구축
 - (시스템 구축) 촬영·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유튜브·홈페이지 정비
- **다양한 계층의 주인공 발굴 및 유튜버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 (이야기 주인공 모집) 공모전, 이벤트, SNS 홍보 등을 통하여 직업·세대·감동이 담긴 여러 이야기 수집 및 보존
 - (유튜버 육성) 대학·교육청·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운영으로 청·장년층 유튜버 양성 및 양질의 영상기록 수집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추진여건

- '2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와 기업실적 저조로 지방세수 및 보통교부세 여건 악화 가중
-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속 약자복지 및 안전분야 확대 정책으로 매칭도비 지속 증가
- 민선8기 후반기 도정비전 이행을 위한 대규모 현안사업 이행과 저출생 극복 사업 등 세출 수요 지속 확대

→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현안사업 속도감 부여를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필요**



이행과제

- 1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투명한 예산운용
- 2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책임성 강화
- 3 지속가능한 중복 성장을 위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
- 4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

1 건전재정 기초 확립 및 투명한 예산운용

1-1. 건전재정 기초 확립

□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 (세출예산 효율화) 모든 투자사업의 타당성·효과성 지속 재검토
 - 불요불급한 예산, 유사·중복 사업, 과잉투자 등 정비
- 절감재원은 저출생 극복, 지역경제 회복, 미래 도약사업에 재투자

□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 (재정성과평가 내실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미흡 사업은 삭감하는 등 환류를 내실화 →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
 - 평가결과 차년도 예산 삭감 및 폐지 등 패널티 엄격 적용
- (성과예산 운용) 성과관리와 연계한 효율적 예산편성 운용
 -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예산성과금 운영

1-2.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투명한 예산운용

□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주민제안 한도액 운영 및 홍보·교육강화, 도민제안 인센티브 확대지급 등 도민 참여 활성화
- (투명한 재정운용) 도민입장 관심항목 재정공시(예산공시 2월, 결산공시 8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로 재정 투명성 제고

□ 수요자 중심 예산 운용

- (찾아가는 예산컨설팅) 수요중심 맞춤형 예산 컨설팅 확대 운영
 - 직속기관·사업소 1기관 1방문 추진(현장 애로사항 의견 청취)
- (성인지예산) 양성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
 - 성인지 예산서 분석용역 추진(중점관리사업 집중 모니터링)

2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책임성 강화

2-1.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분권 추구

□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충

- (보통교부세) 재정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수시)
 - 지역균형 특수수요 등 발굴을 통한 교부세 추가 확보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및 제도개선 등 건의
-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사업 등 적극 발굴 및 건의(수시)
 - 도정현안, 재난안전관리 등 지원사업 자체 점검 실시(4회)

□ 국비 지방이양으로 효율적 전환사업 편성 및 운영

- (1단계, '19년)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39개 사업 1,480억원
- (2단계, '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등 41개 사업 834억원

2-2. 재정책임성 강화 및 경기회복 지원

□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

- (재정투자심사)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연3회)
- (보조금 관리)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사업 관리체계 구축
 -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6회),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현장교육(수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입과 지출의 중장기적 전망으로 구체적 계획 수립
 - 2026~2030년(5년간) 연동화 계획 수립(8월~10월)

□ 재정분석 및 위기관리를 통한 책임성 강화

- (재정분석) 재정 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책임성 확보
 -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14개 지표
- (재정위기시스템) 위기관리지표의 사전점검을 통한 재정위기관리 대응
 - 5개 분야(재정수지, 채무관리 등) 6개 지표

□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

- (신속집행) 상반기 65% 이상, 하반기 92% 이상 목표
- (소비투자) 분기별 4회(목표설정액의 105% 이상)
 - 신속집행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2회)

3 지속가능한 충북 성장을 위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9조1천억원)

3-1.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략적 국비사업 발굴

- **정책적 적합성을 갖춘 정부예산 사업의 전주기 관리 및 지원**
 - (국비사업 발굴) 사업발굴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기획·응모·평가 대응까지 전주기 관리
 - (정례보고) 정부예산 확보 순기에 대응해 정보공유·성과점검 등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정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지역현안·시책 추진을 위한 정부 지역균형발전에산 최대 확보**
 - (지특회계 확보) 도정 시책 구현을 위한 지특회계 사업 편성 및 운영(5월), 정부 차등지원평가 적극 대응 통한 배분한도 확보(~8월)

3-2. 기재부 심의 대응 체계화 및 국회와의 공조 강화

- **기재부 심의 단계별 체계적 대응**
 - (심의별 맞춤형 대응)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기재부 심의(6~8월) 단계별 맞춤형 대응 활동(건의대상, 대응논리) 추진
 - 정부예산안 편성 기초, 동향 등에 분석해 핵심사업 집중 건의
- **국회의원실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통한 국회 심의 대응**
 - (협력강화) 지역구 포함 국회·정당 주요인사, 상임위·예결위 국회 의원 간담회 개최와 수시 방문 건의를 통해 국회 심사 대응

3-3.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분위기 조성

- **정부예산 확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 (직원교육) 정부정책방향 이해, 부처별 업무계획 분석, 정책기획 능력 향상 등 직원대상 기획역량 강화 교육(연1회)
- **직원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 (동기부여) 정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개인별 실적가점(4월·10월) 및 우수부서 선정(2월) 등 성과관리 시행

4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

4-1. 지방공공기관 책임경영 유도로 경영성과 지속 제고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강화

- (경영평가)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의 균형적 평가(2~8월)로 ESG 경영원리 구현과 평가 결과 실적 점검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
* (평가대상) 행안부 주관 4개 (공사·공단), 도 주관 8개 (시군 상수도)
- (재무건전성 관리) 공사 재무현황 등 통합경영 공시(6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부채중점관리 계획 수립(9월), 적정 부채비율 관리

□ 내실 있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추진

- (경영평가) 출연기관 공공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 실시(3~8월), 평가결과 실적 점검 등을 통한 경영개선 유도 및 책임경영 확립
* (평가대상) 총 13개 출연기관 중 10개 기관(개별법에 의한 평가기관 제외) 및 9개 기관장(공무원 겸직 기관장 제외)
- (직무중심 인사관리) 단계적 도입을 통한 공정한 인사관리 제도 운영

4-2. 효율적인 재무관리 및 기금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적절한 부채관리로 안정적 채무비율 유지

- (관리체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으로 채무비율 지속 관리
* (예산 대비 채무비율) 12.43% ('23년 결산기준, 25% 초과 '주의', 40% 초과 '위기')

□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 및 여유자금의 적시 활용

- (성과관리) 기금운용 성과분석(7~11월), 수입 징수내역 관리(매월)
* (도에서 운용 중인 기금) 총 15개 기금(법정기금 4개 포함)
- (자금활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비율 확대 및 지역개발기금 포괄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 도모

3. 사람이 모여드는 인구정책의 중심 중복

추진여건

-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부의 총력 대응
방침을 바탕으로 과감한 저출생정책 추진 필요
-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 정책환경 변화 및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 정책 추진

→ **출생률 제고, 청년 및 소멸지역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 정책 필요**



이행과제

- 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중복 실현**
- ②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조성**
-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 추진**

1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

1-1.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역여건을 반영한 대응방안 마련

- (인구정책 수립) '25년 시행계획(2월) 및 제2차 기본계획^(26~30)(11월) **신규** 수립
-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2회)

□ 인구위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기념행사) 인구의 날 기념식(7월), 임산부의 날 기념식(10월)
- (인식개선) 인구순회 교육(70회), 가족친화 문화조성(10월),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25개사), 100인의 아빠단 운영 **확대**

1-2. 도민체감형 든든한 출생정책 확대

□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

- (출산육아수당^{포함}) 출산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지급
- 출산육아수당 사업성과 평가용역(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 **신규**
- (첫만남이용권) 출생 첫 해 출생아당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 단계별 수요맞춤형 사업 확대

- (임신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남성 30만원, 여성 200만원) **신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2회, 회차당 100만원), 맘(Mom)편한 모바일 서비스 지원(디지털 임신증명서 도입) **신규**
- (출산 지원) 산모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50만원),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50만원)
- (다자녀가정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5명 이상 초 다자녀 가정 지원(100만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120만원) **신규**

1-3. 각계각층 동참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행력 제고

- (인구위기대응TF 등) 인구정책 발굴 및 기관·부서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구위기대응TF 및 자문단 운영

□ 출생친화환경 조성 참여 유도

- (우수시군 선정) 시군 평가 및 우수시군 포상(3개 시군)
- (충북인구포럼)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전문가 토론(7월)

2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조성

2-1. 청년 참여·소통 확대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의 도정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체감형 정책 수립·추진**
 - (청년참여 확대) 청년정책 참여기구 청년도정참여단 구성·운영(50명)
 -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1월)·추진
- **청년과의 소통 및 정책 홍보 강화**
 - (청년 전담기관) 청년활동 활성화 및 청년맞춤형 지원 등 소통·교류 거점공간인 청년희망센터 운영(1개소, 617백만원)
 - (소통창구) 청년과 도민이 함께 청년문화를 공유하는 청년축제(81백만원), 청년포럼 및 소통간담회(4회), 청년포털 운영(상시)

2-2. 지역 특성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취·창업 지원 확대

- **지역 청년의 고용·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일자리 창출) 지역혁신형, 지역정착지원형 등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청년일자리 창출(26개 사업, 3,515백만원) 및 근속장려금(170명, 월 30만원)
 - (취업역량 강화)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3회), 취업준비생 레벨업 지원(300명, 10만원)
- **청년창업 자립기반 구축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 (창업응원금^{공약}) 청년 소상공인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응원금 지원(1,050명, 30만원)
 - (창업자금) 청년창업 우수기업 기술판로·홍보 등 맞춤형 지원(8개소, 16백만원)

2-3.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안정적 지역 정착 유도

- **청년 자산형성 및 주거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행복결혼공제)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미래설계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기회 및 도약 지원(1,340명, 11,906백만원)
 - (월세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4,500명, 월 20만원)
 - (결혼지원) 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 및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인구감소 지역 결혼지원금^{신규}(100만원), 작은 결혼식^{신규}(200만원), 결혼비용 대출이자(50만원)
- **취약청년 발굴-자립 지원까지 맞춤형 사회복귀 지원**
 - (신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상담·프로그램 운영(1,428백만원)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직장적응 교육 지원(4,022백만원)

3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 추진

3-1. 인구감소지역 제도적 지원 및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 (시행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2~’26)」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25년 시행계획 수립
 - (투자계획)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 **맞춤형 전략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 (우수사례) 인구감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행안부} 참가
 - (공모사업) '고향올래(GO郷ALL來)' 및 인구감소지역 관련 공모사업 응모

3-2. 지역 여건분석 및 맞춤형 사업발굴을 통한 인구감소 방지

- **정착여건 개선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 (광역지원계정) 인구·재정 여건 등에 따른 정액 배분
 -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신규} 등 96억(12개 사업, 도·6개 시군)
 - (기초지원계정) 시군 투자계획 평가를 통한 등급별 차등배분
 - 단양 미라클파크 조성, 절초보은 스포츠타운 등 520억(20개 사업, 6개 시군)

3-3. 취약지역 임신·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극복 도모

- **출산 장려 및 지역 정주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사업 추진**
 - (맘편한 태교패키지 확대^{공약}) 인구감소지역 임신부 복리증진을 위한 태교여행 지원(600명)
 - (군 지역 임신부 교통비 지원) 분만인프라 취약한 군 지역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50만원)
 - (가치자람 플랫폼 운영) 임신·출산·육아 정책 및 사업 관련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개선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4. 공정한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

추진여건

- 물가, 성장률 지표는 더디게 개선되고 있고, 상당기간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체감 경기 및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불안요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지방세입액은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전체 지방세입액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및 정부정책, 소비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며, 정부의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따른 감면정책 확대 등으로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성공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징수 강화, 신세원 발굴, 탈루세원 징수, 과표의 합리적 산정 등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 노력 필요**



이행과제

- 1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구현
- 2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
- 3 전략적 징수를 통한 공정 세정문화 조성
- 4 공정한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1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구현

1-1.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든든한 지방세입 확보

□ 세입목표액의 안정적 확보 [목표액 1조 8,990억원]

- (세입여건 모니터링) 징수상황 분석, 세제개편 동향 및 부동산 거래 추이 등 세입여건 상시 모니터링으로 정밀한 세수예측(수시)
-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포상으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세입목표의 성공적 달성 도모(상반기)

□ 촘촘한 지방세 세원관리

- (정확한 감면분석) 체계적인 감면 통계·분석으로 사회정책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영 자료 확보(상반기)
- (고액환급금 관리) 고액환급금(5천만원 이상)에 대한 사전자문으로 빈틈없는 지방세 세입금 관리(연중)
- (무상취득물건 감정평가제 운영^{신규}) 무상취득(증여) 과세물건의 공정한 취득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 실시로 공평과세 제고(연중)

1-2. 납세자와 공감·상생하는 세정정책 기반조성

□ 더 가까이,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

- (어린이 세금교실) 다음 세대 납세자인 초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세 교육으로 성실납세 기반 조성(상반기)
- (마을세무사 운영) 납세자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연중, 마을세무사 30명)

□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앞서가는 세정운영 기반 마련

- (충북 세정포럼 개최)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방세 발전방향 모색 및 세정현안 공감대 확산(연1회)
- (세정 연찬회 등 개최) 지방세제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업무 연찬 기회 제공(연1회) 및 세목별 직무교육으로 전문성 강화(수시)

2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

2-1. 정확한 세입금 관리로 세입 정책 환류 운용

□ 철저한 세입금 관리

- (분석력 제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입금 관리를 위한 주기적 세원 징수 상황 분석 및 관리(매월)
- (세입결산 추진) 정확한 세입금 결산 추진으로 세입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세입 정책 방향 제시(상반기)
- (세외수입 통계) 세입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통계 작성으로 세외 수입 연구 및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 제공(11월)

□ 투명하고 공정한 도 금고 선정 운영

- (공정성 확보) 금고지정 평가기준 마련,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기준 교부·열람 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11월 약정)

2-2.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 체납징수 기반 강화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 (징수활동 강화)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설정·운영(연 2회),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11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 전개
- (다각적인 채권확보) 부동산, 차량 등 각종 재산조회, 신용정보 시스템 활용 전자 예금압류 추진 등 다각적 채권확보 강화(수시)

□ 세외수입 징수기반 강화

- (맞춤형 운영 지원) 부서별 미징수액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찾아가는 「부서 방문 맞춤형 컨설팅」 운영(연 2회)
- (역량강화) 징수목표 이행관리 및 부진 세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징수역량 강화 교육 추진(연 1회)
- (업무연찬 및 시상) 자주재원 확보 및 시군 간 선의 경쟁 유도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연찬회(연 1회), 징수 우수 시군 시상(5개 시군) 추진

3 전략적 징수를 통한 공정 세정문화 조성

3-1.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조세평등 구현

□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고액체납 집중관리) 체납징수 운영계획 수립,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재산압류·공매, 가택수색, 감치 등 고액체납 적극 대응
- (다양한 행정제재)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수입물품 통관제재 등 다양한 행정제재로 징수율 제고

□ 광범위한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확보

- (금융재산 조회 확대) 예금, 보험, 주식, 가상자산^{1회→2회}, 매출채권, 급여 등 즉시 환가 가능한 금융재산 조회 확대 및 압류·추심 강화
- (징수기법 다각화) 공탁금, 리스계약 보증금,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분양권 조회, 산림조합 예·적금 전수조사^{신규} 등 징수기법 다각화
- (납세편의 제공)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납세안내문 (7개 언어) 제작·배포

3-2. 숨은 세원 적극 발굴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엄정한 세무조사

- (법인 세무조사)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1천만원 이상 감면 법인, 2개 이상 사·군 연관 대형법인 등 35여개 법인 선정 조사
- (취약분야 기획조사) 취득세 신고 누락, 감면 사후관리 등 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부문 2개 분야 선정 전수조사

□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납세자 부담 최소화

- (세무조사 유예) 재해·재난 피해업체 및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 고용 및 노인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대상 우수기업 등
-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일정 기업선택제 및 조사결과 조기결정 신청제 운영,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배부

4] **공정한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4-1. **공정한 과세표준 산정 및 성실납세 기반 구축**

□ **지방세 과세표준의 공정성 제고**

- (개별주택가격 공시) 개별주택 현장조사, 가격검증 및 소유자 의견 청취로 적정가격 반영 및 균형성 확보(4월, 9월)
-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가격 산정 및 소유자 의견청취로 신뢰성 확보(정기, 수시)

□ **지방소득세 세수확보 납세 지원**

- (납세편의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신고도우미 운영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제고를 통한 독립세 안착 도모
- (맞춤형 홍보) 납세자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로 개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 유도
 - 홈페이지, 고지서·SNS, 작은 영화관 영상 송출 등 생활밀착 홍보

4-2.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

□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 및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에 대한 조세 법률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연중)
- (심판·심사청구 지원) 법리 검토·결정례 분석을 통해 법적근거를 충실히 반영한 조세심판·감사원심사청구 지원(연중)
- (불복청구서 작성 지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사례 온라인 공개(연중)

5. 도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여건

- 도민 중심의 법제 및 법률지원으로 정책 실효성 강화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
- 행정서비스의 다변화로 적극적 권익 보호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상승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권익구제 제도 운영 필요
-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과감한 규제개혁 · 적극행정 · 도정혁신 추진 필요
- 신뢰받는 통계 생산, 데이터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통계 수요변화에 따른 지원 역량 강화

→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적극 추진**



이행과제

- 1 **도민이 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
- 2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
- 3 **도민이 만족하는 규제개혁 · 적극행정 · 도정혁신 추진**
- 4 **정책지원을 위한 과학적 통계생성 및 통계수요 지속 대응**

① 도민이 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

1-1.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 (무료법률상담) 취약계층 등 도민의 일상생활 속 각종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강화
 - 사회적 약자 등 도민에 적극 홍보 및 시·군 참여 독려 등을 통해 다양한 상담 창구(대면·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찾아가는 상담) 운영 확대
- (주민e직접 플랫폼 유지관리) 주민의 직접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투표·감사·자치법규시스템 등 온라인서비스의 기능개선 지원

1-2.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법제 역량 제고

□ 고품질의 자치법규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화 노력 지속

- (심사 강화) 도, 시·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및 의견 제시로 조례·규칙의 적법성 및 정합성 제고
- (적시 입법) 도정 주요정책 적시 법제화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탄력적 운영 등 입법절차 신속 진행
- (지속 정비) 변화된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 지속 정비 추진

□ 법규 입안 및 해석 능력 배양으로 법제 실무능력 함양

- (교육지원) 도, 시·군 공무원 대상 법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처 전문가와 함께하는 순회 법제교육 추진

1-3.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공정성 제고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권익 구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정기한 준수(60일) 및 심리사건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②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

2-1.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심판 운영

□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 확보로 도민 권리구제 강화

- (신속한 재결) 신속한 심리·재결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및 분쟁 조기 해소
- (공정성 확보) 구술심리 확대로 심리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지확인을 활성화하여 내실있는 심리·재결 추진

□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편의 증진) 온라인 심판청구를 통한 처리과정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최신 재결례, 청구서 작성사례 홈페이지 게시로 편의 증진
- (권익 보호)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및 취약계층 등의 생계형 청구사건 집행정지 적극적 인용 검토

2-2. 소송 대응체계 강화로 행정의 안정성 도모

□ 체계적 소송관리 및 정확한 법률자문 추진

- (논리적 대응) 판례검토 등 쟁점사건의 논리적 대응으로 소송 대응 효과성 및 승소율 제고
- (역량강화)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법률정보 활용지원 및 공직자 송무교육 실시를 통한 소송 대응 능력 향상
- (법률자문) 고문변호사(7명)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

2-3.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선제적 권익보호 등 적극행정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제도 활성화) 창업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방세 감면 안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제도의 인지도·활용도 제고

③ 도민이 만족하는 규제개혁 · 적극행정 · 도정혁신 추진

3-1. 지역현안과 연계한 규제 발굴 · 개선 · 정비 및 적극행정 실행력 제고

□ 지역현안 및 민생규제 발굴 · 개선

- (규제 발굴) 지역 현안과 연계한 발굴보고회, 민생규제 공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분야별 규제 건의과제 적극 발굴
- (규제 개선) 발굴된 규제에 대해 현장토론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혁신TF, 규제개혁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소관부처와 지속 협의·개선
- (규제 정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사전심사로 불합리한 규제 선제적 예방과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정비 추진

□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실행계획 수립 · 공유)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전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 공유를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성과에 상응하는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강화) 위원회 정례화, 수시 의견제시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공무원 보호·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책 마련
※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 수행 지원제도 마련('24.3월)

3-2. 혁신과제 발굴 · 제공 등 도민체감형 혁신 추진

□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혁신과제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혁신 실행계획 수립 · 성과 확산) 정부혁신 계획과 연계한 실행계획 수립 및 환경 · 생태 보전 업사이클링 등 혁신 우수사례 발굴 · 성과 확산
- (수시 공모제안 운영)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제안을 추진하여 정책 · 사업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 (공공자원 개방 · 서비스 제공) 도민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공유누리’ 및 연령별 · 주제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금24’ 운영

□ 도정 발전을 위한 혁신의식 함양

- (연구모임 운영) 도정 혁신 연구과제 발굴 및 개선(안) 관련부서 제공
- (혁신 워크숍) 조직 구성원 상호간 이해 · 소통을 위한 워크숍 추진

4 정책지원을 위한 과학적 통계생성 및 통계수요 지속 대응

4-1.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생성

□ 지역 산업 구조분석 통계조사 실시

- (사업체조사) 도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
 - 도내 174,850개 사업체 대상, 9개 항목(연간매출액, 종사자수, 사업 종류 등)
- (광·제조업조사) 광·제조업의 구조,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 조사
 - 도내 3,045개 광·제조업체 대상, 13개 항목(종사자수, 매출액, 재고액 등)

□ 생산·소득 중심의 지역경제 진단 통계 작성

- (시·군 지역내총생산) 시·군 경제 산업규모 분석을 위한 지역내총생산 작성
- (시·군 소득지표) 시·군 경제활동의 소득분배 상황 파악을 위한 지표
 - 법인, 개인, 정부부문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 140개 항목 / 시산 및 분석 완료(25)

4-2. 전국단위 총조사의 성공적 추진 및 기초통계 작성

□ 전국 대규모 총조사^(5년 주기) 성공적 추진

-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적 변화요구에 부응하는 인구·주택 조사 실시
 - 도내 18만 가구, 45개 항목(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결혼의향, 임대주체 등)
- (농림어업총조사) 농산어촌 환경변화를 반영한 농림어업 조사 실시
 - 도내 7만가구, 133개 항목(논물결러대기, 스마트농업, 외국인 국적 등)

□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다양한 통계조사 실시

- (사회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사회변화 예측을 위한 사회조사 추진
 - 도내 11,616가구 만 15세 이상, 7개 분야 50여개 항목
- (청년통계) 청년층(19-39세)의 경제활동, 소득·부채, 주택소유 등 파악 분석
- (기본통계) 도정 17개 분야별 통계데이터 수집·생산 및 보고서 발간

□ 통계 신뢰성 확보 및 편리한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 (자체품질진단) 생산통계의 품질진단강화로 이용자 신뢰도 향상
- (통계정보서비스) 신속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데이터 활용성 증진
 - 통계보고서 8종, 통계DB, 통계 시각화 등 통계자료 통합 제공

V. 주요 현안사업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안 작성

□ 의 의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 특별법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 발전종합계획안 작성 → 행정안전부제출

□ 성 격

- (법정계획) 「중부내륙특별법」에 의해 수립(법 제6조)
- (중기계획) 8개년('25년 ~ '32년^{법 유효기간})
※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지역주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특화된 계획
- (전략계획) 중부내륙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계획

□ 추진상황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 : '24. 1.
-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체결 : '24. 3.
※ 충북연구원 / '24.3.~'25.1. / 454백만원
-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24. 3.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공무원 설명회와 병행 추진(8개 시도, 27개 시군구 공무원 참석)
-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 사업 발굴 및 제출 : '24.3.~10.
- 중부내륙지역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연구원 실무회의(6회) : '24.3.~11.
- 계획 수립 지침 및 사업 발굴 기준 등 설명, 지역별 발굴사업 취합 및 발굴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협조사항 안내 및 보완 등

□ 향후계획

-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 '25. 2.
-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행안부 제출 : '25. 3.

부서명	정책기획관	담당자	행정6급 이유래 ☎ 2123
-----	-------	-----	-----------------

2. 2026 정부예산 확보 추진

☐ 확보 목표액 : 9조 1,000억원

※ 전년도 확보액(정부안) : 9조 93억원

☐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실적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액	6조 1,000억원	7조원	7조 8,000억원	8조 4,000억원	8조 9,000억원
확보액	6조 8,202억원	7조 6,703억원	8조 3,065억원	8조 8,296억원	9조 93억원

☐ 정부예산 확보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1~5월) : 신규사업 발굴 및 부처별 예산(안) 반영
 - 부처별 예산(안) 작성 제출(각 부처→ 기획재정부, 5. 31일 恨)
- 2단계(6~8월) : 기재부 심사동향 파악 및 반영활동 총력 전개
 - 정부예산(안) 작성 제출(기획재정부→ 국회, 9. 3일 恨)
- 3단계(9~12월) :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증액
 - 정부예산(안) 심의·의결(국회, 12. 2일 恨)

☐ 향후계획

- 대규모 프로젝트 및 혁신성장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 철저한 사전절차(예타 선정 및 통과, 투자심사 등) 이행
-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앞선 발빠른 국비 확보활동 전개

부서명	예산담당관	담당자	행정6급 한효주 ☎ 2232
-----	-------	-----	-----------------

3. 출생률 제고를 위한 중복형 인구정책 강화

□ 추진배경

- 저출생 극복 노력에 대한 높은 대외적 평가와 긍정적인 도민 호응
※ 인구정책유공 '국무총리상', 「임산부 예우 조례」 우수 적극조례 '대상'
- 출생률 지속 견인을 위한 도민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 필요

□ 주요 신규(확대) 사업

① 결혼 분야

- 결혼생활 기반마련을 위한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 합리적인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작은 결혼식** 200만원

② 출산 분야

- 양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120만원
- (태교패키지) 협약시설 및 수혜인원 확대(300명 → 600명)
- (생식세포 동결) 가임력 보존 대상 확대(여성 → 여성·남성)

③ 돌봄·다자녀가정 분야

- 교육사유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
- (100인의 아빠단) 남성 육아참여 인원확대(100명 → 단계별 확대, 최대 1000명)
- (다자녀카드 활성화) 발급기준 완화(막내 나이 12세 → 18세)

□ 향후계획

-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25. 1. ~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인구의 날(7월), 임산부의 날(10월) 기념행사
 - 인구정책 전문가 포럼,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등
-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 : '25. 10.

부서명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행정6급 조형숙 ☎ 4762
-----	-----------	-----	-----------------

VI.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결혼·임신·출생 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①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규	▶ 안정적인 결혼생활 기반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19~49세 초혼 신혼부부 100만원 지원
② 작은 결혼식 신규	▶ 합리적인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1,200만원 이하의 결혼식을 올린 청년 신혼부부 200만원 지원
③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신규	▶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위소득 120% 이하 다태아 출산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④ 인구감소지역 학습· 멘토링 지원 신규	▶ 교육사유로 인한 인구이탈 방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고생에게 온라인교육 콘텐츠 및 1:1 멘토링 지원
⑤ 임신부 모바일 서비스 지원 신규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충북 임신부 전용 게시판 운영 및 디지털 임신증명서 도입
⑥ 다자녀카드 확대	▶ 발급기준 완화(막내 나이 12세 → 18세)
⑦ 100인의 아빠단 확대	▶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위한 인원확대 (100명 → 단계별 확대, 최대 1000명)
⑧ 태교패키지 확대	▶ 인구감소지역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원확대(300명 → 600명)
⑨ 결혼·출산 대출이자, 초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 청주시 사업 참여

□ 지방세 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신설 ※ 감면기한 : 2027. 12. 31.까지	▶ (연장) 3자녀이상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 - (대 상)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감면액) 취득세 면제(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신설) 2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 상) 18세미만 자녀 2명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감면액) 취득세 50% 감면(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VII.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질문의원	소 속	정책복지위원회	질문일자	2022. 9. 15.																															
	성 명	이상정	관리번호	403-01-01 403-01-02																															
질문제목	현금성 복지공약 추진 (육아수당 월100만원 지급, 출산수당 1,000만원 지급)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 현금성 복지공약 중 육아수당과 출산수당 추진계획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3년도 이후 출생아 ○ 사 업 량 : 7,973명 ※ '23년 통계청 출생아수 기준 ○ 사 업 비 : 90,478백만원(도 41,978 시군 48,500) ('23~'26) ○ 사업내용 : '23년 이후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 지급 (단위 : 만원) <table><tr><th>구분</th><th>합계</th><th>0세</th><th>1세</th><th>2세</th><th>3세</th><th>4세</th><th>5세</th><th>6세</th></tr><tr><td>'23년 출생아</td><td>1,000</td><td>300</td><td>100</td><td>200</td><td>200</td><td>200</td><td></td><td></td></tr><tr><td>'24년이후 출생아</td><td>1,000</td><td>-</td><td>100</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100</td></tr></table>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3년 출생아	1,000	300	100	200	200	200			'24년이후 출생아	1,000	-	100	200	200	200	200	100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3년 출생아	1,000	300	100	200	200	200																												
	'24년이후 출생아	1,000	-	100	200	200	200	200	100																										
	□ 그간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23. 2. ○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수립 '23. 4. ○ 출산육아수당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3. 4. ○ 출산육아수당 신청 및 지급 시행 '23. 5. ○ 출산육아수당 지급 관리 시스템 구축 '23. 9.~'24. 1. ※ 출산육아수당 7,287명, 21,861백만원 지급 ('23. 12월말 기준)																																		
□ 향후계획 ○ 출산육아수당 신청·지원 실적 집계 매월 ○ 수당지급 관련 제도지침 및 절차 개선 추진 필요시 ○ 출산육아수당 사업성과 평가용역 '25. 1.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박인숙 (☎220-4760) 팀장 박용식 (☎220-4761) 담당자 최승연 (☎220-4764)

질문의원	소 속	산업경제위원회	발언일자	2022. 9. 15.	
	성 명	김꽃임	관리번호	403-02-03	
질문제목	시·군 청년희망센터 운영비 지원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 제천에 추진 중인 청년희망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추진상황	□ 청년희망센터 운영비(도비) 지원 현황				
	연 번	공 간 명	소재지	운영주체	운영비(도비) 지원여부
	1	충북청년희망센터 (광역센터)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0	도	○
	2	제천청년센터	충북 제천시 독순로 65 3층	제천시	○
	3	청년뜨락5959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9번길 59	청주시	○
	4	청년대로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37	음성군	○
	※ 3개소(청주, 제천, 음성) 각5,000천원(행사 및 사업비)지원 완료				
	□ 검토 결과				
	○도내 11개 시·군 모두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원칙상 시군 청년센터는 시군 책임하에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비로 특정 지역의 시군 청년센터에 설치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시 형평성 위배 소지. 다만, 열악한 시군 재정을 고려해 시·군 청년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로 ‘24년도에 ‘지역청년활동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25년도에는 유관기관 네트워크 사업(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 개최) 및 청년카페사업(제천, 청주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원 예정				
□ 추진실적					
○제천시 청년센터 건립비 지원 : 2,3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시군 청년센터 지원 : 3개소(청주, 제천, 음성), 총12,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시군별 청년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시군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확대 검토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박인숙 (☎220-4770) 팀장 김용길 (☎220-4771) 담당자 이나혜 (☎220-4776)

질문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일자	2022. 9. 28.																				
	성 명	김현문	관리번호	403-05-01																				
질문제목	충북도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관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 충청북도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방안 마련할 것 (신청 시·군, 읍·면·동부터 확대 실시)																							
추진상황	☐ 충청북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운영시기 / 운영장소</th> <th>예산액 (천원)</th> <th>운영 방식</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td> <td>첫째·셋째주 월요일 / 도청 어울마루</td> <td>7,680</td> <td>대면· 전화</td> <td>서비스 확대 운영 (‘23년 ~)</td> </tr> <tr> <td>사이버 무료법률상담</td> <td>연중</td> <td>1,890</td> <td>사이버</td> <td></td> </tr> <tr> <td>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td> <td>연중 /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td> <td>4,400</td> <td>대면</td> <td>시·군 수요 조사후 진행</td> </tr> </tbody> </table>				구 분	운영시기 / 운영장소	예산액 (천원)	운영 방식	비고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	첫째·셋째주 월요일 / 도청 어울마루	7,680	대면· 전화	서비스 확대 운영 (‘23년 ~)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연중	1,890	사이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연중 /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	4,400	대면	시·군 수요 조사후 진행
	구 분	운영시기 / 운영장소	예산액 (천원)	운영 방식	비고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	첫째·셋째주 월요일 / 도청 어울마루	7,680	대면· 전화	서비스 확대 운영 (‘23년 ~)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연중	1,890	사이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연중 /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	4,400	대면	시·군 수요 조사후 진행																				
☐ 추진실적																								
○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 추진 계획 수립 : ’ 22. 9.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대면·전화 상담 확대 - 무료법률서비스 만족도 조사 후 개선 방안 도출 ○ 2023년 당초예산 사업비 요구 및 반영 : ’ 22. 9. ~ 12. ○ 2023년 충청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 수립 : ’ 23. 1. ○ 충청북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실시 : ’ 23. 1. ~ - (대면·전화) 202건, (사이버) 66건, (찾아가는) 9회·85건 / ’23.1.1~12.31 - (대면·전화) 218건, (사이버) 70건, (찾아가는) 7회·96건 / ’24.1.1~12.31																								
☐ 향후계획																								
○ 무료법률상담(대면·전화, 사이버, 찾아가는) 운영 및 홍보 지속 추진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220-2310) 팀장 이종민 (☎220-2311) 담당자 이종희 (☎220-2314)

질문의원	소 속	건설소방위원회	질문일자	2024. 3. 22.
	성 명	박지현	관리번호	415-01-04
질문제목	민간단체보조금 효율적 운영 관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 민간단체보조금 효율적 운영 관련 -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 일환의 활동 강화 - 의원 제안사항 검토 ① 심사 평가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경력기준 등이 명시된 세부지침 마련 ②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를 유도하고, 동일한 보조사업자 지원 등을 제한 ③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세부지침 마련 ④ 매년 보조금 감사 시행에 관한 전담부서 신설			
추진상황	○ 한정된 민간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23.8.30.~현재) ○ 의원 제안사항 ①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으로 구성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사업부서 안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시 심사평가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을 위해 공개모집 ② 동일한 보조사업자 지원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필요 ③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 중단하는 등 패널티 엄격 적용 ④ 지방보조금 전담 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음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예산담당관 이승열 (☎220-2210) 팀장 이영주 (☎220-2221) 담당자 임수혁 (☎220-2226)

질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문일자	2024. 4. 22.
	성 명	박지현	관리번호	416-02-07
질문제목	충청북도 출산 장려 시책 및 응급 인프라 확충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 출생률 제고를 위한 도민이 호응하는 효율성 있는 자체 장려사업 마련 ○ 신생아 및 영아 중심의 지원 사업 마련			
추진상황	☐ 추진배경 ○ 저출생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출생자수<사망자수)로 지역활력 저하 ○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지정, 지역소멸 위기 대두 ☐ 추진실적 ○ 출산육아수당 '23. 5.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23. 8. ○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서비스 ‘가치자람’ 플랫폼 개통 '24. 2. ○ 임신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 '24. 5. ○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 '24. 5. ○ 인구감소지역 임신부 태교 여행 지원 '24. 8. ○ 결혼비용·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24. 8. ○ 초(超) 다자녀 가정 지원, 우리아이 먹거리 할인쿠폰 지원 '24. 8. ○ 다자녀가정 축제 개최 '24. 10. ○ 충북인구포럼 '24. 11. ○ 임신부·다자녀가정 친화문화 조성 -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감면 우선예약, 농협 전용창구 운영(95개소) ☐ 향후계획 ○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25. 1. ○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 '25. 10. ○ 도민체감형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추진 지속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220-4770) 팀장 박용식 (☎220-4761) 담당자 조형숙 (☎220-4762)

질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문일자	2024. 4. 22.
	성 명	박지현	관리번호	416-02-08
질문제목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조속 추진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 미반영 조문 등 포함 개정안 추진, 관련 부처 이해·설득 노력			
추진상황	□ 중부내륙특별법 개요 ○ 법률명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시행 : (제정) '23. 12. 26. / (시행) '24. 6. 27. ○ 주요내용 : 국가 등의 책무, 발전종합계획 수립, 인허가 등의 의제, 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사항 등 ※ 제척조항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수변구역 특례 등 □ 추진상황 및 실적 ○ 특별법 개정 TF 및 특례사항 발굴 추진단 구성·운영 : '24. 1. ~ ○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24. 3. ~ '25. 1. ○ 중부내륙지역 담당 공무원 설명회 : '24. 3. ○ 특별법 개정 특례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2회) : '24. 3. / 5. ⇒ 제척 조항 보완 및 추가, 중앙부처 설득·대응논리 개발 병행 ○ 8개 시·도, 특별법 개정안 협의(6회) : '24. 3. ~ 11. ○ 국회 및 중앙부처 특별법 개정안 설명 및 협력 요청(수시) : '24. 1. ~ ○ 특별법 개정안 조항별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협력 요청 : '24. 8. ○ 2024 중부내륙 발전포럼(토론회) 개최 : '24. 8. ○ 8개 시·도 참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 : '24. 10. ※ 특별법 개정 공동 건의 □ 향후계획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 : '25. 상반기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목표) : '25. 하반기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정선미 (☎220-2300) 팀장 김선희 (☎220-2121) 담당자 김초롱 (☎220-2124)

질문의원	소 속	정책복지위원회	발언일자	2024. 11. 01
	성 명	이상식	관리번호	422-01-01
질문제목	출연기관장 비위행위에 대한 인지 노력, 사후조치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출연기관장 비위행위 보고 및 미보고에 대한 징계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			
추진상황	☐ 관련 규정 (재)충북연구원 인사및직제규정 제45조(징계사유) ①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3. 직무여부를 불문하고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재)충북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복무기강 강화 추진실적 - 원장 등 임원 대상 청렴서약서 징구 -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 예방교육 실시(1회/연)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취득('22.7. 최초취득) -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분기별 1회) ☐ 향후계획 - 원장 공개채용 시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징구 - 비위 및 부패행위 보고 체계 확립 및 출연기관 지도·감독 강화 - 임직원 행동강령 및 윤리교육 실시 -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지속 실시(분기별 1회 등)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정선미 (☎220-2300) 팀장 황병두 (☎220-2131) 담당자 이상옥 (☎220-2135)

질문의원	소 속	정책복지위원회	발언일자	2024. 11. 01
	성 명	이상식	관리번호	422-01-01
질문제목	출연기관장 비위행위에 대한 인지 노력, 사후조치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 출연기관장 비위행위 보고 및 미보고에 대한 징계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			
추진상황	☐ 추진현황(공직기강 관리방안) ○ 복무기강 확립 자체교육 실시(연 2회, 기관장 포함) - 대상 : 전직원 - 시기 : 상·하반기(연 2회) - 내용 : 근무시간내 사적용무 및 무단이석 등 불성실한 근무사례 근절,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등 → 2024년 하반기 교육완료 ○ 청렴서약서 징구 - 대상 : 기관장 및 임원 - 내용 : 금품·향응 및 부정청탁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위한 솔선수범 등(서약서 징구 완료) ☐ 향후계획 ○ 규정 미비사항 보완 -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내규 미비사항 파악 -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하여 관련 규정 정비 ○ '25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비위행위 발생한 기관은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등급 조정 가능(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예산담당관 이승열 (☎220-2210) 팀장 손정미 (☎220-2241) 담당자 박범철 (☎220-2243)

질문의원	소 속	정책복지위원회	질문일자	2024. 11. 01.
	성 명	이상식	관리번호	422-01-03
질문제목	소멸 고위험지역 관련 충청북도만의 획기적이고 특징적인 정책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추진상황	□ '24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 3대 전략분야 58개 사업, 2,604억원* * 기금 173, 국비 905, 도비 433, 시군비 1,012, 민자 81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26개 사업, 502억원) ○ 지역자원 기반의 일자리 창출(18개 사업, 1,893억원) ○ 지역 매력 강화로 생활인구 확대(14개 사업, 209억원) □ '24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신규사업 발굴·추진 ○ 사 업 명 : مطم한 태교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인구감소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300명 ※ '25년 인원확대 예정 ○ 사 업 비 : 280,800천원(도 112,800, 시군 168,000) ○ 사업내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교를 위한 도내 휴양시설 연계 태교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 추진실적 : 사업량 300명 중 317명 신청 ※ 시행 3개월 만에 목표 초과달성 조기 마감 □ '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신규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서울런 협력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인구감소지역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1,200명 ○ 사 업 비 : 2,333,292천원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 사업내용 : 인구감소지역 온라인 교육 및 멘토링 등 프로그램 지원 ※ 충청도-서울시 지역간 교육자원 격차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4. 12. 23. □ 향후계획 ○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과 긴밀한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사업발굴 지속 추진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꺽인숙 (☎220-4760) 팀장 최연락 (☎220-4781) 담당자 김이선(☎220-4782)

질문의원	소 속	정책복지위원회	질문일자	2024. 11. 01
	성 명	이상식	관리번호	422-01-05
질문제목	사업별 도비 매칭 관련 재정 형편에 따른 도비 지원 재검토 필요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의 구조조정 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 시군의 재정상태에 따른 도비 지원 재검토 필요			
추진상황	□ 추진현황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정 시군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 일부 시군에서 도비 보조비율 상향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의 악재로 인하여 도비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조비율 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다만, 민선8기 도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 '25년 당초예산 편성시 도비 보조비율을 전년대비 10% 상향하여 기 편성하였음(출산육아수당, 도시농부 육성,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 우리도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모든 재정사업 원점 (Zero- Base) 재검토 및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 사업 등 중점 투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 추진하였음			
	□ 향후계획 ○ 도 재정여건 개선시 제안해 주신 도비 지원에 대해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 해보겠음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예산담당관 이승열 (☎220-2210) 팀장 김홍순 (☎220-2211) 담당자 김은영 (☎220-2212) 팀장 이영주 (☎220-2221) 담당자 임수혁 (☎220-2226)				

VIII.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발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발언일자	2022. 7. 22.
	성 명	박진희	관리번호	402-10-01
발언제목	김영환 도지사 공약파기 사과하라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주요공약 파기 철회와 함께 현실성 있는 공약이행 계획을 밝혀야 할 것			
추진상황	□ 추진방향 ○ 세계적 경기침체, 도세 증가율 급감 등 재정여건 악화로 선거 당시와 여건 변화 고려 ○ 국가 정책방향,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국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내실있도록 사업설계			
	□ 추진상황 ○ 출산육아수당 지원 - 사업목적 유사성에 따라 국가지원사업*과 연계, 도 자체사업으로 지방비 추가 지원** *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아동수당, 부모급여 ** (출산육아수당) '23. 1월 이후 도내 출생아 1인당 총1,000만원 지급(1세~6세) - '23년 출생아 7,580명(통계청) 중 7,287명에 지급(96.1%) ○ 어르신 감사효도비 신설 - '23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 감사효도비 연 1회 10만원 지원 ※ 사회보장제도 신설 불가의견 통보에 따라, 대체사업 발굴·변경 추진중 ○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 지급 제외기준 완화***로 수혜자 확대 ***2,900만원 이상→3,700만원 이상, 귀농인·연금수급자 등 기준 삭제 - 지원대상 확대 : 농업인 → 농어업인(어업인 지원 확대) - 50만원 → 60만원 지급('23년~)			
	□ 향후계획 ○ 개별공약별 사업 추진 : 공약사업 추진부서(인구청년정책담당관, 노인복지과, 농업정책과) ○ 공약사업 추진실적 점검관리 : 정책기획관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정선미 (☎220-2300) 팀장 황병두 (☎220-2131) 담당자 이수빈 (☎220-2132)				

발언의원	소 속	정책복지위원회	발언일자	2022. 11. 30.
	성 명	안지윤	관리번호	405-03-01
발언제목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사업 관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사업 주관부서의 일원화 필요			
추진상황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29.6억원(정책기획관실 9.7/노인복지과 18.2 / 장애인복지과1.7) -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비, 콘텐츠 운영, 홍보비, 시군사업단 운영 등 ○ 사업내용 : 충북도민의 인생이야기 영상·제작 공유 □ 추진실적 ○ '23. 2.: 사업추진 방향 재검토 : 官(노인복지과, 미래인재육성과) 주도에서 民(노인복지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대학 등) 역할 강화 ○ '23. 11.: 道 주관부서 일원화(노인복지과, 미래인재육성과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영상자서전 전담직원 보강(2명) ○ '25. 1.1. : 영상자서전 전 도민 대상 확대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총괄기능의 영상자서전팀 신설(3명) □ 향후계획 ○ 거점기관 기능 강화(DB관리 및 시스템 구축) 및 수행기관 확대(17개소 → 21개소)로 이야기주인공 및 유튜버 발굴을 통한 영상자서전 사업활성화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붐업조성, 평가체계 마련 및 연계사업 발굴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정선미(☎220-2300) 팀장 김낙영(☎220-2151) 담당자 김동원(☎220-2152)

발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발언일자	2022. 12. 16.
	성 명	이동우	관리번호	405-08-01
발언제목	충청북도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의회 무시, 도를 넘었다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집행부의 기강 해이와 의회 무시 행태			
추진상황	□ 추진배경 ○ 업무처리 시 법정 절차 무시 및 도의원 배제 등 기강 해이 ○ 도의원 및 의회 경시(무례한 언사 등) □ 추진실적 ○ 도 실·국·원·본부 및 출자출연기관에 공문 발송 : '22. 12. 21. - 제목 : 도의회 관련 대응 철저 요청 < 준수사항 > ▶ 법령·조례 등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준수 ▶ 도의회 및 도의원 존중(답변·대응시 언행 주의 및 자료제출 적극 대응) ▶ 본회의, 상임위 등 출석요구 공무원 불출석 자제 (회기일정 참고하여 사전 일정 조정) *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 시, 사전 보고 □ 향후계획 ○ 도 실·국·원·본부 및 출자출연기관에 도의회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시 상기 준수사항 지속 당부 요청(수시)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정선미 (☎220-2300) 팀장 오금년 (☎220-2141) 담당자 이은경 (☎220-2142)

발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발언일자	2023. 6. 23.
	성 명	박지현	관리번호	409-04-03
발언제목	충북권역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건강권 확보에 대한 제언 (시멘트 업체에 대한 ‘자원순환세’ 도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과 관련하여 폐기물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멘트 업체에도 부과하도록 보완 필요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시멘트 생산지역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 소각 처리 등으로 환경 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발생 ○ 지역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신규과세를 통해 외부불경제 해소 및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 ○ 자원순환시설세 신설 : 지역자원시설세 “폐기물 재활용분” 과세대상 추가 ※ 시멘트 생산을 위한 소각용 폐기물에 한함 ☐ 추진상황 ○ ('22.9월) 정부(행안부,환경부), 국회 등에 자원순환시설세 신설 건의 ○ ('23.1.31)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협의체* 구성 * (충북) 제천, 단양, (강원) 강릉, 동해, 삼척, 영월 ○ ('23.4월) 법제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 -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수탁자: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 시멘트 생산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업체에게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당한 과세안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 ○ ('24.8월)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완료 - 시멘트사 과세는 시멘트 가격 상승,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영향 -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자원순환시설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보고 ○ ('24.9월) 행정협의회 실무위원,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방문 건의 - 자원순환시설세 법 개정안 공동발의 및 국회 토론회 주최 건의 ○ ('24.10월) 박홍배 국회의원 및 환경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현장 방문 - 공장주변 피해주민 의견청취, 공장 대기 및 폐기물 관리 실태 점검 ※ 시멘트업체는 '21. 2. 25.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협약 후 기금 268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24. 9월말 기준) ☐ 향후계획 ○ 중앙부처 건의 및 국회 대응 등 법제화 적극 지지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세정담당관 이정노 (☎220-2750) 팀장 김윤미 (☎220-2751) 담당자 이지영(☎220-2753)

발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발언일자	2023. 9. 6.
	성 명	유재목	관리번호	411-01-01 ~ 03
발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쓰이고 있는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선정, 발굴 등과 관련하여 도의 주도적 역할강화 및 도-시군 사업 연계·협력 필요			
추진상황	☐ 추진계획 ○ 광역 및 기초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광역-기초 사업 간의 연계 강화 및 중앙부처 연계 사업 집중 투자 추진 등 도 역할 강화 ☐ 추진실적 ○ '24년 광역기금, 중앙부처(국토부, 중기부 등) 연계 사업 집중투자 및 기초기금 연계 추진 ○ '24년 기초기금 계획수립 시 기금운용 기관(지방재정공제회)의 사전 컨설팅(2회) 및 사업계획서 기획 지원(사업 효율성, 지역여건 분석 등) ☐ 향후계획 ○ 광역기금 사업 발굴 시, 사업 목표 특정(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하여 광역 및 시군 연계사업 기획·추진 ○ 기초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관련 유관기관(지방재정공제회, 행안부 등) 사전 컨설팅 및 도 기획지원 ○ 부처 공모사업 관련, 여건 분석 등 사업 기획 지원 지속 추진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박인숙 (☎220-4760) 팀장 최연락 (☎220-4781) 담당자 김이선 (☎220-4782)

발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발언일자	2023. 10. 12.								
	성 명	박지현	관리번호	412-01-01 ~ 04								
발언제목	충청북도 ·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을 전면 개혁하라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지방보조금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1차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력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 ○ 도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사업에 대한 동일한 보조사업자의 계약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재평가하는 방식 도입 검토 ○ 충청북도 차원의 “실효성있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방안”을 구축하여 연속적으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세부 지침 마련할 것. ○ 위법성이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사업을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 검토											
추진상황	□ 보조금 현황 ○ 2021년~2023년 충청북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억원) <table><tr><td>년도</td><td>2021년</td><td>2022년</td><td>2023년</td></tr><tr><td>예산액</td><td>321</td><td>366</td><td>342</td></tr></table>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321	366	342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321	366	342								
□ 추진실적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부서 안내 ○ 동일사업에 동일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필요하여 제한은 어려움.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 중단하는 등 패널티 엄격 적용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 전담 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조직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예산담당관 이승열 (☎220-2210) 팀장 이영주 (☎220-2221) 담당자 임수혁 (☎220-2226)

발언의원	소 속	산업경제위원회	발언일자	2023. 10. 12.
	성 명	김꽃임	관리번호	412-02-02
발언제목	2024년 예산편성, 도민의 민생문제해결이 최우선입니다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할 것 ○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증액 △영세·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도민의 생활 및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 충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상황	☐ 재정여건 ○ (세입) 정부의 재정기조 ‘건전재정 강화’ 로 전환, 고금리 지속 및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 (세출) 호우피해 복구,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조치사항 ○ '24년 당초예산 →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 유지 - 모든 재정사업 원점(Zero-Base) 재검토,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 ·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 투자속도 조절 및 ^{외부}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원 충당 - 도민안전,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 강화 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편성 -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작성으로 오차 최소화 노력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예산담당관 이승열 (☎220-2210) 팀장 김홍순 (☎220-2211) 담당자 김은영 (☎220-2212)

발언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발언일자	2023. 10. 18.
	성 명	김현문	관리번호	412-05-01
발언제목	훈민정음 창제정신 계승한 ‘충청북도 창의상·장인상’ 제정·시상하자!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한글 창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충청북도/충청북도 교육청 창의상과 장인상을 제정하여 시상해야 함			
추진상황	☐ 추진현황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채택된 제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을 구분하여 시상함 ☐ 추진실적 ○ 제안 접수 총 318건^{수시301, 공모17} 중 채택 30건^{수시27, 공모3} ※ 2024 충청북도 제안 공모전 : '24. 9. 5. ~ 9. 22.(18일간) ○ 우수제안 심사·시상 : 12건 - 제안심사실무위원회(11.8.) → 국민투표(11.14. ~ 11.20.) → 도정조정위원회(12.9.) ☐ 향후계획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 및 우수제안 시상 지속 추진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220-2310) 팀장 원지희 (☎220-2321) 담당자 한명경 (☎220-2325)

발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발언일자	2024. 1. 23.																																																				
	성 명	박지현		관리번호	414-04-01																																																				
발언제목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철저한 용역 관리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용역 시행 필요성 및 효용성 판단 사전절차 확대 ○ 용역 결과 정책 반영 평가 필요 ○ 용역 결과 공개 및 용역 결과 열람정보실 운영																																																								
추진상황	□ 추진상황 ○ 정책연구관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추진중 ○ 정책연구 완료 용역은 도 홈페이지, 행안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공개 - 자체평가 및 용역결과(최종보고서), 활용상황 등 ○ 분기별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종합 성과점검(완료용역 내외부 종합평가)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부서평가 추진 □ 추진실적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현황 : 20명(당연직 6, 위촉직 14) - 심의대상 : 모든 정책연구용역(POOL예산 및 부서예산) < 용역심의 제외대상(조례 제3조) > ▶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인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 기술용역 및 전산·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용역 - 심의내용 :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결과 평가 및 활용 상황 점검 등 - 개최실적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개회 횟수</th><th colspan="6">심의대상</th><th colspan="4">심의결정</th></tr><tr><th colspan="2">계(A+B)</th><th colspan="2">POOL예산(A)</th><th colspan="2">부서예산(B)</th><th rowspan="2">원안</th><th rowspan="2">조정</th><th rowspan="2">재검토</th><th rowspan="2">결정금액</th></tr><tr><th>계</th><th>건수</th><th>요구금액</th><th>건수</th><th>요구금액</th><th>건수</th><th>요구금액</th></tr><tr><td>'23년</td><td>11</td><td>71</td><td>7,296</td><td>18</td><td>614</td><td>53</td><td>6,682</td><td>60</td><td>10</td><td>1</td><td>5,844</td></tr></table> ○ 정책연구용역 '23년 종합성과점검 추진 - 점검기간 : '23. 12. ~ '24. 1. - 점검대상 : '23년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61건 - 점검방법 : 1차 내부평가 및 2차 외부평가에 따른 종합등급 결정 <table><tr><th>구 분</th><th>계</th><th>1등급(상위 30%)</th><th>2등급(중간 40%)</th><th>3등급(하위 30%)</th></tr><tr><td>용역건수</td><td>61건</td><td>18건</td><td>25건</td><td>18건</td></tr></table> □ 향후계획 ○ 완료용역 사후관리(홈페이지 및 프리즘 공개) 이행 여부 점검 및 독려						구 분	개회 횟수	심의대상						심의결정				계(A+B)		POOL예산(A)		부서예산(B)		원안	조정	재검토	결정금액	계	건수	요구금액	건수	요구금액	건수	요구금액	'23년	11	71	7,296	18	614	53	6,682	60	10	1	5,844	구 분	계	1등급(상위 30%)	2등급(중간 40%)	3등급(하위 30%)	용역건수	61건	18건	25건	18건
	구 분	개회 횟수	심의대상						심의결정																																																
			계(A+B)		POOL예산(A)		부서예산(B)		원안	조정	재검토	결정금액																																													
	계	건수	요구금액	건수	요구금액	건수	요구금액																																																		
	'23년	11	71	7,296	18	614	53	6,682	60	10	1	5,844																																													
구 분	계	1등급(상위 30%)	2등급(중간 40%)	3등급(하위 30%)																																																					
용역건수	61건	18건	25건	18건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정선미 (☎220-2300) 팀장 황병두 (☎220-2131) 담당자 신혜정 (☎220-2136)																																																									

발언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발언일자	2024. 1. 30.																										
	성 명	박재주	관리번호	414-05-01																										
발언제목	청년들의 기회 및 지원보장, 합당합니다?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각 시·군 청년센터 설치,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추진상황	☐ 추진계획																													
	○ 청년 활동 공간을 위해 시·군 청년센터 조성 중 및 개설 독려																													
	- '25년 옥천(5월), 진천·충주(하반기) 개소 예정, '26년 영동, 보은 조성 중																													
	○ 청년 정책 제안 사업(청년도정참여단, 청년축제(축제추진기획단)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 청취																													
	○ 청년도정참여단 온오프라인 및 도내 모든 청년 대상 온라인 정책 제안 지속 추진																													
	☐ 추진실적																													
	○ 청년센터 설치 : 광역 1개(도), 기초 3개(청주, 제천, 음성)																													
	○ 도 청년정책 참여사업 추진																													
	<table><tr><th>연 번</th><th>사업기관</th><th>사 업 명</th><th>사 업 내 용</th></tr><tr><td>1</td><td rowspan="3">충북청년희망센터(도)</td><td>충북청년광장</td><td>○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하는 청년기구 - 14팀 55명 참여 / 정책 제안 56건</td></tr><tr><td>2</td><td>청년유관기관 네트워크</td><td>○ 청년지원기관 네트워크 및 실무자 교육 - 감담회 4회 / 역량강화 교육 2회 워크숍 2회</td></tr><tr><td>3</td><td>충북청년축제</td><td>○ 청년이 기획참여하여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행사 - 청년정책 유공 표창 청년 소통 간담회 등</td></tr><tr><td>4</td><td>뜨락5959(청주)</td><td>청주청년네트워크</td><td>○ 청년정책 제안, 워크숍 참여(정책 연구), - 41명 / 4개 분과 / 정책 제안 10개</td></tr><tr><td>5</td><td>청년대로(음성)</td><td>음성군 안팎청년들</td><td>○ 청년정책 제안, 주민참여예산 건의 등 - 22명 / 청년 소통 간담회·정책발표 참여</td></tr><tr><td>6</td><td>제천시청년센터(제천)</td><td>청년 리빙랩</td><td>○ 청년정책 의견수렴 및 지역맞춤형 정책제안 등 - 10명 / 정책 제안 11건</td></tr></table>				연 번	사업기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	충북청년희망센터(도)	충북청년광장	○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하는 청년기구 - 14팀 55명 참여 / 정책 제안 56건	2	청년유관기관 네트워크	○ 청년지원기관 네트워크 및 실무자 교육 - 감담회 4회 / 역량강화 교육 2회 워크숍 2회	3	충북청년축제	○ 청년이 기획참여하여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행사 - 청년정책 유공 표창 청년 소통 간담회 등	4	뜨락5959(청주)	청주청년네트워크	○ 청년정책 제안, 워크숍 참여(정책 연구), - 41명 / 4개 분과 / 정책 제안 10개	5	청년대로(음성)	음성군 안팎청년들	○ 청년정책 제안, 주민참여예산 건의 등 - 22명 / 청년 소통 간담회·정책발표 참여	6	제천시청년센터(제천)	청년 리빙랩	○ 청년정책 의견수렴 및 지역맞춤형 정책제안 등 - 10명 / 정책 제안 11건
	연 번	사업기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	충북청년희망센터(도)	충북청년광장	○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하는 청년기구 - 14팀 55명 참여 / 정책 제안 56건																											
2		청년유관기관 네트워크	○ 청년지원기관 네트워크 및 실무자 교육 - 감담회 4회 / 역량강화 교육 2회 워크숍 2회																											
3		충북청년축제	○ 청년이 기획참여하여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행사 - 청년정책 유공 표창 청년 소통 간담회 등																											
4	뜨락5959(청주)	청주청년네트워크	○ 청년정책 제안, 워크숍 참여(정책 연구), - 41명 / 4개 분과 / 정책 제안 10개																											
5	청년대로(음성)	음성군 안팎청년들	○ 청년정책 제안, 주민참여예산 건의 등 - 22명 / 청년 소통 간담회·정책발표 참여																											
6	제천시청년센터(제천)	청년 리빙랩	○ 청년정책 의견수렴 및 지역맞춤형 정책제안 등 - 10명 / 정책 제안 11건																											
☐ 향후계획																														
○ '26년 이후 영동, 보은, 단양 등 청년센터 신설 예정, 전 시군센터 설치 지속 독려																														
○ 거점 청년센터 지정(국무조정실) 및 광역-기초 청년센터간 네트워크를 위한 연계사업 지속 추진																														
○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및 소통 창구 다각화를 위한 청년활동 추진																														
- 청년도정참여단 온·오프라인 활동 활성화, 청년포럼 확대 추진																														
- 시·군과 연계(순회)하여 청년 간담회(반기별) 및 청년축제 개최																														
○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정책제안 시상, 청년정책 멘토제 도입 등) 발굴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박인숙 (☎220-4760) 팀장 김용길 (☎220-4771) 담당자 이나혜 (☎220-4776)

발언의원	소 속	정책복지위원회	발언일자	2024. 1. 30.
	성 명	김정일	관리번호	414-06-01 414-06-03
발언제목	청주시 문의면과 청남대는 상생발전해야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문의면을 포함한 충청지역의 규제 완화와 보상에 대한 내용이 담기도록 특별법 개정에 적극 노력 ○ 청남대를 포함한 문의면의 규제 완화 및 개발 과정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적극 반영			
추진상황	☐ 추진상황 및 실적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안 발의 : '22. 12. 29. ○ 민관정 특별법 발의 환영 및 입법 촉구대회 : '23. 1. 12.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 '23. 12. 18. ※ 제정 : 2023. 12. 26 / 시행 : 2024. 6. 27. ○ 특별법 개정 TF 및 특례사항 발굴 추진단 구성·운영 : '24. 1. ~ ○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24. 3. ~ '25. 1. ○ 특별법 개정 특례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2회) : '24. 3. / 5. ⇒ 제척 조항 보완 및 추가, 중앙부처 설득·대응논리 개발 병행 ○ 8개 시·도, 특별법 개정안 협의(6회) : '24. 3. ~ 11. ○ 국회 및 중앙부처 특별법 개정안 설명 및 협력 요청(수시) : '24. 1. ~ ○ 특별법 개정안 조항별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협력 요청 : '24. 8. ○ 2024 중부내륙 발전포럼(토론회) 개최 : '24. 8. ○ 특별법 개정 관련 환경단체 간담회(2회) : '24. 8. ○ 대청댐 수몰주민연합회 간담회(1회) : '24. 9. ○ 8개 시·도 참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 : '24. 10. ※ 특별법 개정 공동 건의 ○ 대청댐 수몰주민연합회 임원 간담(1회) : '24. 11. ☐ 향후계획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 : '25. 상반기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목표) : '25. 하반기 ⇒ 실효성 있는 특례사항 발굴 및 개정안 통과를 위해 쏠 실국 총력 대응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정선미 (☎220-2300) 팀장 김선홍 (☎220-2121) 담당자 김초롱 (☎220-2124)

발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발언일자	2024. 4. 30.
	성 명	박지현	관리번호	416-07-01
발언제목	50년을 참아왔다. 충청북도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하라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반영			
추진상황	□ 현 황 ○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조항이 제척됨 - 제척사유 : 대전권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교통망, 관광산업 등이 인구, 교통, 물류 등 수요가 높은 대전권으로 밀집될 우려 ⇒ 대청호 일원 등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를 적극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 추진상황 및 실적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3.12.26. ※ 시행 : '24.6.27. ○ 특별법 개정 TF 및 특례사항 발굴 추진단 구성·운영 : '24. 1. ~ ○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24. 3. ~ '25. 1. ○ 중부내륙지역 담당 공무원 설명회 : '24. 3. ○ 특별법 개정 특례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2회) : '24. 3. / 5. ⇒ 제척 조항 보완 및 추가, 중앙부처 설득·대응논리 개발 병행 ○ 8개 시·도, 특별법 개정안 협의(6회) : '24. 3. ~ 11. ○ 국회 및 중앙부처 특별법 개정안 설명 및 협력 요청(수시) : '24. 1. ~ ○ 특별법 개정안 조항별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협력 요청 : '24. 8. ○ 2024 중부내륙 발전포럼(토론회) 개최 : '24. 8. ○ 8개 시·도 참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 : '24. 10. ※ 특별법 개정 공동 건의 □ 향후계획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 : '25. 상반기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목표) : '25. 하반기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정선미 (☎220-2300) 팀장 김선희 (☎220-2121) 담당자 김초롱 (☎220-2124)

발언의원	소 속	산업경제위원회	발언일자	2024. 6. 24.
	성 명	박경숙	관리번호	417-06-01
발언제목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정부예산 정책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생활인구 증대를 고려한 사업 기획 필요			
추진상황	□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기금목적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 기금구성 :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 ○ 기금배분 :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등급별 결과에 따라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 □ 추진실적 ○ 사업추진체계 : 충청북도 지방소멸대응 협력단 구성(2022~) - (총괄) 도, (자문·심의) 인구정책위원회, (사업추진단) 6개 시군 및 도 실과 ○ 충북 지방소멸대응 혁신포럼 실시('24. 5. 22.) -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적 투자계획 수립 및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대학교, 유관기관, 기업 등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 ○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발굴 및 '25년 투자계획 제출 - 기초계정 : '청년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등 23개 사업(960억원) - 광역계정 :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보은청년올래' 등 13개 사업(96억원) □ 향후계획 ○ 도를 중심으로 시군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건 분석 및 사업발굴 지속 추진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박인숙 (☎220-4760) 팀장 최연락 (☎220-4781) 담당자 김이선 (☎220-4782)

발언의원	소 속	정책복지위원회	발언일자	2024. 11. 25.
	성 명	박지현	관리번호	422-06-01
발언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현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정의 역량 결집 필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역할 강화(개정 노력) 필요 ○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 중부내륙지역 단체장 및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개정법안 발의 및 통과 노력 ○ 전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 개정 릴레이 챌린지 및 서명운동’ 제안			
추진상황	□ 중부내륙특별법 개요 ○ 법률명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시행 : (제정) '23. 12. 26. / (시행) '24. 6. 27. ○ 주요내용 : 국가 등의 책무, 발전종합계획 수립, 인허가 등의 의제, 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사항 등 ※ 제척조항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수변구역 특례 등 □ 추진상황 및 실적 ○ 특별법 개정 TF 및 특례사항 발굴 추진단 구성·운영 : '24. 1. ~ ○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24. 3. ~ '25. 1. ○ 중부내륙지역 담당 공무원 설명회 : '24. 3. ○ 특별법 개정 특례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2회) : '24. 3. / 5. ⇒ 제척 조항 보완 및 추가, 중앙부처 설득·대응논리 개발 병행 ○ 8개 시·도, 특별법 개정안 협의(6회) : '24. 3. ~ 11. ○ 국회 및 중앙부처 특별법 개정안 설명 및 협력 요청(수시) : '24. 1. ~ ○ 특별법 개정안 조항별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협력 요청 : '24. 8. ○ 2024 중부내륙 발전포럼(토론회) 개최 : '24. 8. ○ 8개 시·도 참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 : '24. 10. ※ 특별법 개정 공동 건의(충북도 → 국회 및 중앙부처) ○ 민관정위원회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24. 11. ○ 릴레이 챌린지(도의회, 시군, 출자출연기관 및 기고관련 전문가) : '24. 11. ~ 12. ○ 민관정위원회 개정 촉구 결의대회 : '24. 12. □ 향후계획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 : '25. 상반기 ○ 개정 촉구 결의대회, 도민 보고대회, 서명운동 추진 : 개정안 발의 후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목표) : '25. 하반기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정선미 (☎220-2300) 팀장 김선홍 (☎220-2121) 담당자 김초롱 (☎220-2124)

발언의원	소 속	정책복지위원회	발언일자	2024. 12. 11.
	성 명	박지현	관리번호	422-08-02
발언제목	MZ세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MZ세대 공무원 맞춤형 처우개선 - 업무 부담 경감 및 합리적 업무 배분을 위한 방안 마련 - 저연차 공무원 활력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검토			
추진상황	□ 추진개요 ○저연차 공직자의 조직문화 개선 등 혁신적 의견을 수용하고자 도정혁신 연구모임 ‘끌어올림’을 구성*하고, 혁신모임에서 도출된 개선 의견을 소관 부서에 전달 및 직접 개선과제 시행 등 방법으로 도정반영에 노력 * 6급 이하, 20~40대 젊은 직원으로 구성 □ 추진실적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 활동내역 - ('23년) 교육 5회, 토론 5회, 연수 1회, 소모임 2회 - ('24년) 교육 3회, 토론 5회, 연수 1회, 소모임 2회 ○도정반영 -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13개 방안 소관부서 제시(수용 9건, 미반영 4건) - 신규·전입자 웰컴키트 제작·배부('24년) - 공통업무매뉴얼 ‘새로고침’ 제작 및 시도행정게시판 게시('24. 2.) - 조직문화 개선 미션달력 제작('24. 12.) - 조직문화 개선 우수부서 선정에 심사위원 참여('23년, '24년) □ 향후계획 ○도정혁신모임 ‘끌어올림’ 지속 추진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220-2310) 팀장 원지희 (☎220-2321) 담당자 김태홍 (☎220-2326)

IX.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제 목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 택 일	제408회('23. 4. 19)	관 리 번 호	12대-408-1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소 관 부 서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건의(결의)처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			
건의·결의 주요 내용	○ 충북도민들은 충북지역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사건, 소년 보호사건, 가정폭력사건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청주지방법원과 연간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은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되며, 지방법원 관할인구가 오히려 적은 울산에는 이미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었음. ○ 이에 충북도민이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			
관련 현안 (문제) 사업 추진상황 및 도 대응현황	○ 2020. 8.31. 이장섭 국회의원 등 11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2020. 9. 1.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0.11.18. 전체회의 상정, 검토보고, 대체토론[제382회 국회(정기회) 전체회의] →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부 ○ 2022.12. 5. 상정, 축조심사[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1소위원회] ○ 2023. 4.17.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도민 대토론회 개최 (충북지방법변호사회) ○ 2023. 4.19.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송부(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 ○ 2023. 5.17.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이장섭 국회의원실, 충북지방법변호사회) - 지사님 축사 전달(토론회 책자 수록용) - 충청북도 후원명칭 사용 승인 ○ 2024. 5.29.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24. 6.12. 이광희 국회의원 등 14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향 후 계 획 (도의회 협조사항 등)	○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충북지방법변호사회와 지속 협조			
진 도	완 료		추 진 중	○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2310) 팀장 태문걸(☎2331) 담당자 최유진(☎2335)				

제 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 택 일	제411회('23. 9. 6.)	관 리 번 호	12대-411-1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소 관 부 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건의(결의)처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건의·결의 주요 내용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월 국회에 법안 발의되었으나 법안처리 지연 중 ○ 특별법 제정은 중부내륙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위로임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 개최 등 법안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9월 중으로 반드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관 련 현 안 (문제) 사업 추진상황 및 도 대응현황	○ 법안 발의(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28인) : '22.12.29. ○ 입법예고 : '23.1.3.~1.17.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제1법안소위 회부) : '23.2.16. ○ 국회 행안위 법안제정 공청회 개최 : '23.4.19. ○ 시도지사협의회, 특별법 공동결의문 채택 : '23.5.9. ○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 '23.5.30. ○ 특별법 연내 제정 100만명 서명운동 추진 : '23.6.~8. * 1,075,599명 서명 참여(목표 대비 107.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 '23. 11. 2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23. 12. 7. ○ 국회 본회의 통과 : '23. 12. 8.			
향 후 계 획 (도의회 협조사항 등)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통과 건의활동 지원			
진 도	완 료	○	추 진 중	
정책기획관 정선미(☎2300) 팀장 김선홍(☎2121) 담당자 이유래(☎2123)				

제 목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 택 일	제417회('24. 6. 24)	관 리 번 호	12대-417-4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소 관 부 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건의(결의)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건의·결의 주요내용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을 위한 4개 시·도 연합조직의 기구 및 정원을 신속히 원안대로 승인 ○ 초광역 도로 및 철도 교통, 첨단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부품 등 국가위임사무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사무 발굴 협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문서 유통,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 협조			
관련 현안 (문제) 사업 추진상황 및 도 대응현황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조건부 승인(행안부) : '24. 5. 20. - (조건)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승인하되, 규약명 및 규약 제2조 명칭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개시 전까지 변경 조건('24.11.30.까지) - (사유) '지방정부'용어 사용의 헌법·법령 취지 위배 및 혼선 우려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 행정예고 : '24. 7. 1~22. - (개정) 명칭 : 충청지방정부연합 → 충청광역연합 사무처리 개시일 : 고시 후 6개월 이내 → 2024년 12월 31일 이내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 승인(행안부) : '24. 10. 8. ○ 충청광역연합의회 1대 임시회 : '24. 12. 17.~18. - (연합장 선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 (연합의회장 선출) 노금식 의원(음성군2) ○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 '24. 12. 18. ○ 충청광역연합 사무개시 : '24. 12. 31.~			
향 후 계 획 (도의회 협조사항 등)	○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중앙 정부 지원 지속적 요청			
진 도	완 료	○	추 진 중	
정책기획관 정선미(☎2300) 팀장 조미애(☎2111) 담당자 이준희(☎2117)				